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의 17개 단체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을 출범시켰다. 정치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과학기술인들이 그저 변하는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온 숨은 주역이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새로운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미 '세계화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버린 우리 사회를 더 이상 반(反)과학적 정서에 빠져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과학적 세계관이 인정받는 합리적 사회

정부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국정 의 핵심에 분명하게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직접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히고,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과학자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줄 것도 요구했다. 단순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과학자 스스로 국정 의 현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자세로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기술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은 분명하다. 과학자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과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학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합리성'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창조성'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합리한 독선과 아집'을 떨쳐내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인의 꿈이다. 전설이나 신화 수준에 지나지 않는 2천 년 전의 황당한 세계관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는 것이 그 시작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현대 과학적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인문학과 예술이 짝트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과학과 인문학의 진정한 융합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과학자의 정치 참여는 선택 아닌 필연

과학자는 연구실과 실험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과학기술인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어왔고, 비교적 성실하게 실천해왔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률가라고 모두 법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과학자라고 모두 연구실과 실험실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21세기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은 과학자 사회에서도 필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과학자가



글 **이덕환** 대한화학회 회장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해야 할 일이 이미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버렸다. 벤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보급하는 일에도 과학자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법적 업무에도 과학자의 역할이 있다. 첨단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하고 감시해주는 NGO 활동에도 과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지어 스포츠 경기를 위한 훈련에 필요한 과학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 분야만 유독 과학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에서 과학자가 해야 할 역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가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학자의 정치 참여가 불합리와 독선에 의한 분열과 갈등으로 썩어가고 있는 정치를 살려내는 새로운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이미 민주화된 과학기술 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과학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다.

과학자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정치에 뛰어들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과학자가 정치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학적으로 성공한 과학자가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훌륭한 과학자가 정치에 잘못 끼어들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대만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Y. T. 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벨상 수상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그가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총통은 지금 감옥에 있다.

과학자의 정치 참여가 쉬울 수도 없다. 과학의 대표적인

특징인 합리성이 정치 현실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자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학에서 강조되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과학자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과학자들의 준비 과정을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 이념, 계층의 갈등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능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이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에 뛰어드는 과학자가 단순히 직능 대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요즘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직능 단체들이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칫하면 전문가 집단의 정치 참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한 거부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과학자의 정치 참여가 과학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구성은 의사나 약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과학기술계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희망은 버려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서로 다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몇 사람의 별난 목소리가 과학기술계를 압도하는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이다. 연구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다. 물론 최종 정책 방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ST**